

제3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3.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18:10~18: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3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안전 심의

□ 의결안전 제61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 ‘검찰이 공소제기한 지적사항(12건) 중 4건’에 대해서, ‘1. 선급금 원가 인식’ 지적사항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의’로 보임. ‘4. KUH(수리온) 초도사업 원가 대체’도 ‘고의’로 인정함. ‘9. 수리온 2차 양산사업 등 원가 이중계상’ 부분도 ‘고의’로 인정함. ‘11. T-50 이라크 사업 거래업체 Raytheon社에 대한 선급금 이연’ 부분도 ‘고의’로 인정함. 다음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은 지적사항(11건)에서 금감원이 고의로 올린 안전 중 ‘(1) 후속군수지원(A/S) 계약 체결前 관련 원가를 타 사업 부담 대체’ 이 부분도 ‘고의’로 인정함. 나머지는 ‘중과실’ 내지 ‘과실’로 인정할 수 있음. 금감원이 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중 5가지를 ‘고의’로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증선위의 고소나 통보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본 사건은 현재 검찰이 안전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분식회계혐의로 기소하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고발’ 통보는 무의미하다고 봄. 다만, 법원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비교하여 볼 때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관련 증거자료는 검찰에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위원)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 중에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과 저희들이 금감원 자료와 회사 측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서 수정할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논의를 많이 했음.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23건 중에 선급금 원가인식 관련해서는 회계처리기준에서 대금지급기준이 K-IFRS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공사 원가까지 포함되고 있고 공사진행율이 “0”인 경우에도 지급이 되고 있어서 위반이 맞다고 판단됨. 또한, 협력업체 진행율이 신뢰성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진행률이 8월 진행율보다 낮은 경우도 다소 발견되고 있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맞다고 판단됨. 고의성 관련되어서는 회사가 대금지급기준을 사용을 했고 그 대금지급기준을 사용한 건에 대해서 감사인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의성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함. 다만, 감리지적 기준금액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진행율, 특히 2018년 8월에 수정된 협력업체진행율이 있다고 하니 입고기준보다는 협력업체 진행율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지적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함. 두 번째는 금감원 지적사항 수리온 초도 사업 원가 대체 관련되어서는 지금 위반유형이 전산조작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해서는 회사 쪽에서도 이것은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의 부분에는 ○○○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서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됨. 세 번째로 환원처리 관련된 이슈인데 수리온 2차 양산사업 등 원가 이중계상과 T-50 Raytheon社에 대한 선급금 이연은 결국 회계처리기준 관련해서 환원처리 시점과 전산조작 시점 사이에서의 환율차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매출액 및 금융수익 과대(과소) 계상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됨. 그리고 고의성 관련되어서는 2건 모두 다 ○○○에게 서면보고 또는 구두보고를 했다는 문답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의’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후속군수지원(A/S) 계약 체결 前 관련 원가를 타 사업에 부당 대체한 이것도 유형은 전산조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군수지원 관련 비용이 수리온 2차 양산사업의 계약前 원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임의반영 됐다는 것을 증거로 봤음. 고의성 인정 여부에서도 ○○○의 문답서에서 ○○○○○에서 관련 비용에 대해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을 알았다고 문답서에 적시를 해서 이 고의성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봄.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는 ‘고의’로 판단됨. 나머지 23건 중 5건을 제외한 18건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고의성 인정과 관련해서 회사와 금감원의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다툼의 여지가 많고, 특히 고의성 입증 부분에 있어서는 모호한 면이 많아서 18건 중에서 17건은 ‘중과실’, 1

건은 '과실'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동 안건에 대해서 회사와 경영진이 분식회계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통보'보다는 업무정보로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임.

- (위원) 기본적으로 ○○○는 다른 안건과 다르게 1심 판결이 난 상태에서 우리 증선위가 진행되었고, 그 1심 판결이 금감원의 원안과 상반되게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음. 감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감리위원회가 진행될 때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음. 그래서 저희가 감리위원회에서 수정심의 되었던 내용을 참고했고 법원의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했음. 그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첫 번째 대금지급기준. 금감원 표현에 의하면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 원가로 간주해서 공사진행율을 상향 조작했다는 내용임. 기본적으로 방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에서 대금지급에 있어서 통제는 진행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제 하에서 회사가 1999년 설립 시부터 ○○○○○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착·중도금이든 자체자금이든 관계없이 대금지급기준으로 회사에서는 계상을 해 왔고 그것이 또 회계감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고 인정을 해 왔던 것 같음. 하지만 이러한 관행적 처리가 실제 작업진행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후에 상당부분 자체자금을 활용한 회사의 손익을 조작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그래서 진행율을 반영한 회계기

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손익을 계산해야 되겠다는 원칙에서는 회사의 처리기준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됨. 그래서 금감원 원안에 기초해서 저희가 기준위반으로 판단했음. 다만, 지적금액 산정에 있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진행을 산정에 신뢰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논거를 많이 제시했지만 그 상황에서 진행의 여부는 최선의 추정을 통해서 진행을을 판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이 제시했던 입고기준은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과연 입고기준이 협력업체 진행을보다 회계기준에 더 부합하느냐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 증선위에서도 똑같이 판단했음. 그래서 지적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협력업체 진행을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음.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것이 전산조작을 통해 허위로 자재출고 처리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용어에 의하면 LRU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해외 LRU의 경우에도 주문 개발 및 생산에 의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도 거기에 맞추어 관리된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음. 그래서 해외 LRU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반영한 입고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그에 대한 판정은 1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되어 저희도 그런 식으로 판정했음.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전산조작을 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저희 증선위는 지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정했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고 나머지 21건 중 4건을 저희가 금감원의 ‘고의’ 원안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 위원님께서 배경부분을 설명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손익에 대한 추정문제, 예상손실이라든가, 고의성 부분에 있어서 금감

원의 판단이 상당 부분 과도한 판단인 점 등을 고려해서 대다수 '중과실'로 했고 감리위원회에서도 충당금. 특히, 예상 손실을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고의'를 '중과실'로 했음.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받아들였고 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적시되어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중과실'로 판정했음. 또한, '검찰통보'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형사소송의 다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검찰에 통보를 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래서 굳이 검찰통보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검찰에 다 제공해줌으로써 향후 원활하게 그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면 될 것 같음. 추가적으로 이 사건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었고 우리의 회계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한 것은 사실임. 2011년 이 무렵에는 회계에 대한 중요성, 책임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임. 그래서 이 회사의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범죄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금감원에서는 아주 다양한 분식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 금감원이 언급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 할 정도로 그런 의식이 없었던 것 같음.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관점에서 금감원에서 내부통제개선 권고를 원안에 포함시켰지만 그 이행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선권고에 대한 각서 제출과 더불어 금감원에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보고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 비록 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이 다양한 증거에 기초하여 약 3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선고된 만큼, 증선위가 심의를 함에 있어 법원의 판결문은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적사항별로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인정 여부, 위반금액 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 금감원과 피조치자가 각각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대심제를 통하여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였음. 제61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첫째, 지적사항 매출·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중,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율을 상향 조작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감사인의 위반금액을 ‘입고기준’에서 ‘협력업체 공사진척도 기준’으로 수정하겠음. 동 지적사항의 경우 선급금 대금 지급분을 발생원가로 취급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협력업체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이 명백하고 동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임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원안대로 수용하되, 회사와 감사인의 위반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작업의 진행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입고기준’이 아닌 ‘협력업체 공사진척도 기준’으로 수정하겠음. 둘째, 지적사항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담 대체 관련하여 [2]-①, [2]-②, [2]-⑤, [2]-⑥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③, ②-④, ②-⑦은 다음과 같이 의결 하겠음. ②-③ T-50 PBL 사업의 계약 前 원가를 타 사업에 부당 대체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2013년 당시에는 T-50 PBL 사업 선투입비용의 정산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으며, 2014년에 원가 대체한 FA-50 초도양산 사업은 2014년에 종료 되는 사업으로 회사가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 원가를 대체한 개연성이 있고, 2013~2014년 총 매출액에 는 변동이 없어 회계분식의 의도를 가지고 회계처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겠음. 수리온 체계개발과 관련한 치공구를 일시 부당 상각한 건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처리 당시 후속 계약 체결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 회사의 회계처리가 총매출 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회사가 회 계분식의 의도를 가지고 회계처리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회사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겠음. 전산조 작을 통해 허위로 자재 출고를 처리했다는 지적사항의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의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겠 음. 입고된 해외 협력업체 재공품은 이미 입고시점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입고 후 전산 출고를 허위로 하였다 고 하더라도 회사의 회계처리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어 회계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셋째, 총예정원 가 임의 조정 등을 통한 당기손익 등 조작 지적사항 중 금 감원이 ‘중과실’ 및 ‘과실’로 판단한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동 사안은 총예정원가의 추정과 관련된 사안으 로 회사가 총예정원가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공사의 손실금액을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려웠던 점,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점, 일부
 공사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할 때 회사가 회계분식 의도를 가지고 회계처리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위반동기 ‘고의’는
 ‘중과실’로 수정하겠음. 넷째, 금감원이 ‘중과실’ 및 ‘과실’로
 판단한 계약수익 및 총예정원가 변동내역 적시 미반영 2건
 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다섯째, 고의로 발생원가 인식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기간손익을 조작하였다고 지적된 4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말 시점에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확
 정되지 않은 점,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목표손익 달성을 위해 회사가 의
 도적으로 발생원가 인식을 이연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겠음.
 여섯째, 고의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와는 달리 정산받지 못할 개
 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회계처리
 에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후속 사업에
 동 개발의 효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시 회사가 위법사실을 알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어 회사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겠음. 일
 곱째, 금감원이 ‘중과실’로 판단한 ‘하자보수충당부채 과대
 계상’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여덟째, 회사의 前경영진이
 동 안건에 기술된 지적사항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회사와 관련자
 에 대한 조치 중 ‘검찰통보’는 제외하고 검찰에 업무정보를
 송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마지막으로, 회사의 위반
 행위는 내부통제 전반에 취약점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바 '내부통제기준 개선권고'에 더하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음. 회사는 내부통제제도 개선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내용을 금감원에 6개월 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금감원은 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증선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3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40분 폐회)